

지방분권 헌법에 못박아 '2할 지방자치' 끝낸다

文대통령 '지방분권형 개헌'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61년 5·16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는 1991년 30년 만에 부활했으나 실질적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지난 정부들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획기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분위기도 지방분권 개헌에 긍정적이어서 내년에 개헌이 실현된다면 이 같은 지방의 숙원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은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나뉘

제2국무회의·지방정부 개칭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등 '자치권 보장' 대선공약 실현

어 논의됐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교정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가 헌법기구인 만큼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

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야권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헌 의사를 보임으로써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개헌 이전에도 지방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개헌과 맞물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간담회 형태의 회동을 수시로 열 것

로 보인다.

어떤 형식으로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제화·정례화될 경우 그간 소외돼 온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도지사 9명 가운데 4명이 각 당의 대선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한 만큼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도 중앙정치 무대에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 이낙연 총리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일보훈대상 시상식 참석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5·18 기념식서 눈물 많이 흘려 진심 담긴 따뜻한보훈 펼칠 것"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4일 "(국가) 통합과 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은 보훈에 있다고 믿는다. 보훈제도를 내실화하고 보훈가족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 보훈처장은 이날 제 44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을 위해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제가) 평소 눈물이 많지 않은데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훈은 따뜻하고 진심어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따뜻한 보훈"을 강조했다.

총복 총주 출신인 그는 이날 "광주가 낯설지 않다"며 광주와의 인연도 언급했다.

피 보훈처장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 국토종단을 하면서 광주를 거쳤다. 워낙 음식이 맛있고 풍경도 따뜻해 지친마음을 많이 달랠 수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했지만 지난 2002년 유방암 진단으로 군생활에 위기를 맞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는 절제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군은

'신체 일부가 손상될 경우 퇴역시킨다'는 군인사법의 자동퇴역 규정을 적용해 2006년 11월 강제 전역시킨 바 있다.

친하게 지내는 군(軍) 동기생이 5·18 당시 광주로 와 헬기를 타고 선무방송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주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피 보훈처장의 광주 방문은 지난달 18일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이후 2번째다. 이날 오전 광주에 온 그는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하고 광주지역 보훈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달 17일 제29대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그는 1979년 육군소위로 입관한 군 출신 인사다. 특전사 중대장을 거쳐 육군 첫 여성 헬기 조종사로 활약했다. 2006년 11월 강제전역됐다가 복직 소송을 통해 2008년 5월 복직 한 후 이듬해 9월 전역했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장성급 남성이 주로 맡아오던 보훈처장에 진보 성향의 예비역 영관급 여성이 임명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와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윤장현시장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협업팀 구성 건의 김갑섭대행 에너지클러스터 특별법·한전공대 지원 요청

文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민간영역의 일자리 창출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협업팀을 꾸릴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했다.

윤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광주형 일자리 등 일자리 정책에 선제 대응했다"면서 "재정을 투입해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모델을 만들 듯이

민간영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통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혁신형 일자리 정책이다.

세부적으로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 핵심이다.

윤 시장은 또 "매각작업이 진행되는 금호타이어의 일자리 안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면서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기고용보장계획과

지역인재 채용, 연구개발, 설비·시설투자 계획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광주를 찾았을 때 엠코코리아가 400명을 새롭게 채용한 사실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상기하고 "광주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시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 달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 현안을 흔쾌히 받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한전공대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

원을 요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은 물론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중소형 선박 수리 및 소형선박 건조 특화산업 조성 ▲해경 제2정비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의 조기 확정, 부산-목포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등 지역 현안사업을 협의하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가뭄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산강 IV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추진 등 항구적 가뭄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일보훈대상 시상식... '호국보훈' 5명 수상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1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서는 상이군경 부문에 윤평현(68)씨, 중상이자 부인 부문 김순옥(61)씨, 미망인 부문 정장순(79)씨, 전몰군경 유족 부문 허산래(여·66)씨, 특별부문 김태모(85·6.25참전용사)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5명의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행사를 주최·주관한 김여송 광주일보사 대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점수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장, 이연산 전몰군경유족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염연자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지부장, 강철부 무공수훈자회 광주지부장 등 보훈단체장들도 참석, 자리를 빛냈다.

김여송 대표는 개식사에서 "5·18기념식, 6월항쟁기념식,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서 보듯 새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어 기쁘다. 앞으로 정부가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 보훈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수상하신 다섯 분은 국가유공자로서, 유공자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것임을 널리 알려 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합리적인 계획, 탄탄한 시공으로 신뢰와 행복이 있는 기업!

토목 · 건축 · 해양공사 / 토목설계

(주)에프엠산업 | 본사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3, 3층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서구 풍곡로 11번길 10, 2층 ☎(062)261-2272